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 후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

- ✓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채무자구제·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종합지원창구 역할 수행
- ‘26.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억하기 쉬운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시행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채무지원 거점 확대 등 추진

빚으로 지친 일상¹³을 치료⁷⁵하세요! ☎1375로 전화주세요!

- ✓ 금융·비금융 정보를 결합하여 경제적 위기자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추진 및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금융정보 확대
- ✓ 민간금융권과 협업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대출·카드·보험 상품 제공 및 개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는 민간의 사회공헌사례 발굴·홍보 추진

1

개 요

‘26.7.14.(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이하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 ①학생·청소년, ②자살 긴급대응, ③자살 장소 관리, ④경제적 위기자, ⑤고립·위기가족, ⑥돌봄·간병 부담, ⑦미디어·온라인, ⑧특수직군·집단보호, ⑨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추세*로, 특히 사회안전망,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문제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자 수(비중(%))(자살통계연보)
: ('15) 3,089명(23.0) → ('20) 3,249명(25.4) → ('24) 4,398명(29.6)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하였다.

2 대책 주요 내용

< 1.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1375) 신설 >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빛으로 지친 일상¹³을 치료⁷⁵하세요. ☎1375)를 부여한다.

신복위는 '02년 설립 이래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약 7천개)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과 함께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및 신속면책제도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취약·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 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공 등 채무문제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규 대표번호는 '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 연체기간에 따른 신속·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및 이자 감면

** 개인회생·파산 상담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및 심리 간소화, 소송비용 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상담번호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1375

“일상을 치료하다”

- 개인의 ‘빛 문제’와 관련한 모든 종합상담 지원

1375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단순 채무상담



- ✓ 채무현황 점검
- ✓ 상담·안내
- ✓ 해결방안 안내

신복위 채무조정



- ✓ 이자 감면
- ✓ 원금 감면
- ✓ 상환기간 조정 등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 ✓ 개인회생 신청지원
- ✓ 파산·면책 신청지원
- ✓ 절차 안내 및 지원

서민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복합지원



- ✓ 서민금융 연계
- ✓ 고용·복지 연계
- ✓ 심리상담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



- ✓ 불법사금융 상담
- ✓ 피해 구제 지원
- ✓ 신고 접수 및 연계

1375에서 한 번에 해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상담내용은 안심·비밀보장**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빛 문제로 힘든 당신, 1375가 함께하겠습니다.

☎ 1375 | 당신의 오늘을 회복하고, 내일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또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 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26년 7월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하여 12개로 확대되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는 6개소(현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 2.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추진 >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 현장 확인 및 지원하는 발굴시스템 운영 중 ('15~, 현재 21개 기관 제공 위기정보 47종 활용 중)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신복위)를 추가로 연계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서민·취약계층 대상 특화 금융상품 제공 >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및 상환능력 제고까지 금융의 역할이란 인식하에, '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 시 보다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하여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4.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발굴·홍보 >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플랫폼(잇다) 내 화면 예시 >

서민금융

금융상품 안내 금융생활 지원 고객지원 서민금융 한눈에

로그인

민간금융사 위기지원 제도 한눈에

민간금융사의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제도를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금융지주 전체 ▾
지원분야 전체 ▾
대상 전체 ▾
초기화 ↺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 (KB희망금융센터) #채무조정 #신용상담 #심리상담 #연체지원 연체 또는 연체우려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진단 및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채무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보이스피싱 #긴급생계비 #법률상담 #심리지원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구조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자살위기 대응 #자살예방 #109상담 #긴급연계 #위기대응 고객의 자살 언급이나 자해 시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또는 경찰·소방 등 긴급기관으로 연계합니다.	바로가기 >
위험고객 지원 #위기감지 #자살예방 #채무지원 #상담연계 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위험 고객에게 자살예방 상담, 정책서민금융 또는 카드사 자체 채무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바로가기 >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무료보험 #피해보상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보험을 무료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

※ 본 화면 예시는 별첨에 제시된 사업들만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플랫폼 구현 과정에서 금융기관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이 나열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호영 (02-2100-1652)
		담당자	사무관	정재윤 (02-2100-1653)
담당 부서 <공동>	국무조정실 금융재기지원과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44-200-6371)
		담당자	서기관	유승은 (044-200-6390)
담당 부서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장호 (044-202-6660)
		담당자	사무관	김성목 (044-202-6668)
담당 부서 <공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책임자	과 장	전종태 (044-205-2341)
		담당자	사무관	박진섭 (044-205-2351)
담당 부서 <공동>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주무관	김겸희 (044-202-3169)
담당 부서 <공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직무대리	이윤구 (02-2110-3164)
		담당자	서기관	김다혜 (02-2110-3504)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담당 부서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노진상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유기석 (044-204-7488)
담당 부서 <공동>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책임자	본부장	오선근 (02-750-1021)
		담당자	부 장	박성우 (02-750-1071)
담당 부서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본부	책임자	본부장	심재철 (02-2128-8300)
		담당자	부 장	김금석 (02-2128-8305)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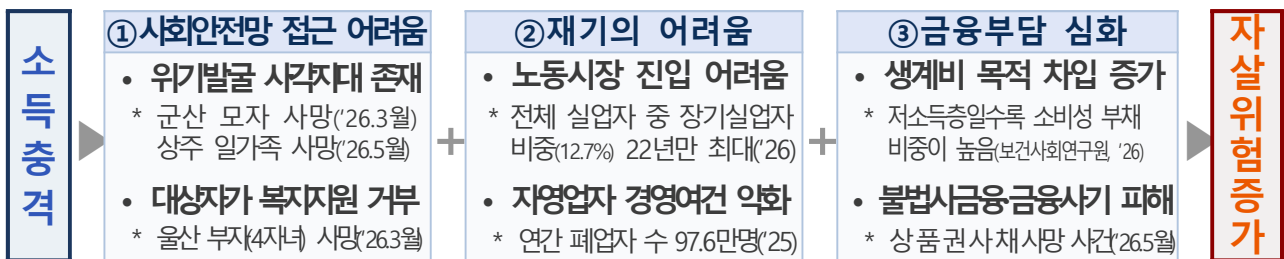
□ 지난 10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Econocide")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

* 경제문제 원인 자살자 수(%)(자살통계연보) : ('15) 3,089명(23.0) → ('20) 3,249명(25.4) → ('24) 4,398명(29.6)

○ 경기변동에 따른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급감 등 충격 발생시, 이를 완충할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거나 재기의 기회가 부족할 경우 위험 증가

※ 외환위기('97, +5.4명), 카드대란('02, +4.7명), 금융위기('08, +5.0명), 코로나19('20, +3.4명)

○ 대출증가와 채무상환압박 등 채무부담 문제로 전이되거나 불법사금융 금융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시 자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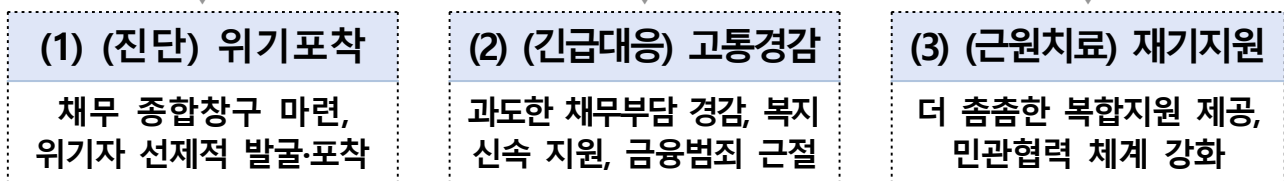
□ 국민주권정부의 범부처 자살예방전략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25), 장기채무 탕감 등 포용금융 적극 추진 등에 힘입어 최근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나,

* '25.10월부터 7개월 연속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전년대비 감소(동기간 8,256명 → 7,355명(△901명))

○ 사회안전망·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포착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 도움의 손길이 못 미쳤던 사례발생 지속

○ 아울러, 경제적 위기는 실직·폐업·부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의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상황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범부처·민관합동으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종합처방(진단+긴급대응+근원치료)' 제시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 실현"

(1) 위기 포착 :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빨리,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지원제도를 모르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 방지

< ※ 주요 기관별 채무자 구제제도 >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 채무조정(원금·이자감면 등, '25년 21만명 신청)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절차 간소화·소송비용 지원 등, '25년 2,685명 연계),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자 배치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 회생·파산 소송대리('25년 2.3만명),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 (금융감독원) ▲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문자구두 경고, 채무종결요구), 전화번호·SNS 차단 요청, 수사의뢰

○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마련] 채무자 구제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수행 금융

*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종합상담

-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일상치료 ☎1375)를 마련, 대국민 홍보 금융·과기

대표 홍보문구(예시) : "빚으로 지친 일상¹³을 치료⁷⁵하세요. ☎1375로 전화주세요!"

○ [컨트롤타워 구축] 개인채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채무 지원제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수행하는 채무자지원부서 금융위 자체 운영 후, 전담조직화 협의 금융·행안

* 개인연체채무 통계관리체계 구축, 채무발생부터 소멸까지 전주기 관리, 법원 회생·파산 연계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등

□ 선제 발굴·포착 민·관이 힘을 합쳐 경제적 위기자 발굴의 사각지대 해소

○ [공공]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중인 금융정보(연체정보, 정책 서민금융 거절정보 등)를 확대하고,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금융·복지

* (예) 금융(리볼빙, 고금리대출 등)·비금융(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데이터를 결합해 위기자 발굴

- 주민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10개 지방정부) 활용 금융·행안

○ [민관협업] 금융회사 연체우려자 사전정보체계를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감지·긴급보호 위한 표준 대응체계 확산 추진 금융

*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복합지원 안내연계 강화 및 연계실적을 포용금융 평가체계 지표에 포함

【민간금융권 사례】 경제적 위기자 발굴 및 자살예방 노력

- **우리지주(카드)**는 금융사기 피해정보, 통신·관리비 연체 등 카드 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위기자를 발굴하고, 카드대금 결제유예, 자체 채무조정 또는 정책서민금융 등 연계('26.下)
- **하나은행**은 콜센터 상담 시 자살 언급, 자해시도 정황 등 발언을 감지할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안내 또는 경찰·소방으로 긴급연계하는 체계 구축·운영 중('25~)

(2) **고통 경감** : 채무의 짐은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은 더 튼튼히 합니다

< ※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주요 추진현황 >

- ✓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 정리**(새도약기금 : 88.5만명/10.4조원 채무매입, 26.9만명/2.3조원 우선소각)
- ✓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혁신**(자체·조기 채무조정 활성화, 매각 제한, 소멸시효 도래시 소각원칙)
- ✓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최저신용자 대상 3~6%, 신용하위 20% 대상 한자리대 금리 공급)
- ✓ **정책서민금융 공급 대폭 확대**(‘24년 5.6조원 → ‘25년 7.2조원 → ‘26.1~5월 3.9조원)
- ✓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초고금리 불법사채 원천 무효화**
-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지원*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 * ‘26.3월 시행 이후 약 3달간 피해자 574명 상담 → 불법추심 2,119건 중단, 무효확인서 356건 발급
- ➔ **(포용금융 강화) 개별 금융소외계층 지원대책에서 나아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금융배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포용금융을 제도화·항구화**(‘26.6월~)

□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금융 채무조정 강화,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

- **[금융채무]**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①, 공공기관 연체채권^②, 대부업권 보유 채권^③ 등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금융**
 -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규율 강화(허가제 전환) **금융**
- **[비금융채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여러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하는 시스템 마련 **금융**, 신속면책제도 협약 법원 및 채무지원 거점 확대 **금융법무**
 - *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중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예정(50→56개, ~’26.末),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추가(10→12개, ’26.7.2)

□ **복지서비스 신속 지원** 경제적 충격 완충을 위한 긴급 지원체계 강화

- 자살유족 대상 경제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계 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확대 **복지**
 - * 학자금(자녀 1인당 140만원), 임시거처(가구당 200만원), 상속부채 등 법률비용(가구당 100만원) 등

□ **금융범죄 근절** 전방위적 범죄 수단·경로 차단·예방 및 경각심 제고

- **[불법사금융]** 상품권 매매 등 변종수법 피해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구제,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차단 **금융**
 - * 1)불법사금융업자 신고포상제, 2)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공유오피스 불가)
- **[금융사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신종 피싱범죄 의심 계좌 거래정지 선제 도입(6.30.),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강화 **금융**

【민간금융권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 관련 노력

- 신한은행은 긴급생계비·심리상담·무료보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종합지원체계 지원 중(‘23~)
- NH농협은행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지원 실시(‘26~)

(3) **재기 자원** : 현실의 걱정은 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더 촘촘한 복합지원**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정신건강 종합패키지 제공

<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개요 >

◆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원활한 경제생활 복귀 및 상환능력 제고까지 포용 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연계·제공중('24.1월~)

- 서민금융센터 방문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용(국민취업지원 등),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등) 등도 확인하여 관계기관(고용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연계
- 복합지원 연계자수 : ('24) 7.8만명(고용 2만명, 복지 5.8만명) → ('25) 16.5만명(고용 6.5만명, 복지 10만명)

☞ **【사례】** 고시원에 생활 중인 40대 1인 가구 A씨는 과다 채무, 실직, 대인기피 및 공황장애 → ① 심리안정프로그램 연계, 불법사금융예방대출(50만원), 파산절차 지원 ②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안정된 주거지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 **[금융 취약계층]** 민관협업으로 복합지원 연계자 특화 금융상품*(적금·대출·카드) 및 중대질병·사망시 채무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료 제공^{금융}

* **(BNK부산은행)** 정책금융 성실상환 취약차주의 제도권금융 안착을 위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출시('26.7월)
(우리지주카드) 일반카드, 정책금융카드 모두 발급이 어려워도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희망카드 출시('26.7)

- 생계비계좌(250만원^{한도} 압류금지) 제도개선^{금융법무}, 채무조정 이용자 등 대상 신용부채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로 원활한 경제생활 지원

* 계좌개설 제한(한도계좌 1인 1개, 20일내 추가개설 금지) 예외 적용, 250만원 초과 금액 별도계좌 자동예치

- **[고용 취약계층]**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진입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내일이음패키지(발굴·경력설계·훈련·알선) 제공^{노동}

- **[위기 소상공인]** 은행권 등과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폐업·재기 지원을 선제 안내하고 금융·고용·복지 등 수요자는 복합지원 연계^{중가금융}

- **[정신건강 우려자]** 자살유족에 대한 정신건강 연계 개시, 상담 매뉴얼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정보 제공·연계 실효성 제고^{금융·복지}

□ **민간 사회공헌 종합플랫폼**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업목록 링크를 서민금융플랫폼(잇다)에서 종합 제공^{금융}

【민관협업 사례】 KB희망금융센터(‘25.12월 개소(전국 6개소))

- 선제적으로 채무연체고객(타행 연체 포함)에게 채무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조정안 안내
- 채무자(신복위 상담) 대상 마음돌봄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1,650명 대상 심리상담 4,178건 제공)